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규제 완화(안 제6조의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 인가기준을 완화하여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도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요구되는 증자 금액에서 하향조정(100%→50%)하고,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지점,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부담 완화로 영업구역 내 영업활성화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저축은행 해산·폐업 등 인가 심사기준 마련(안 제6조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해산·합병 등의 인가 심사를 하는 경우
감안해야 하는 기준이 부재한 상황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해산·합병 등의 인가를 심사하는 경우,
금융산업의 합리화 및 효율화,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, 신용질서 유지
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근거 기준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령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해산·합병 심사시 논란 최소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3. 대주주 자격 심사 기준 정비(안 제7조의4, 제26조, 별표1의 5호, 별표2의 5호, 별표3의 5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도관형태인 PEF-SPC 구조를 통해 저축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PEF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, SPC의 실질 소유주 등에 대한 심사 공백 발생 가능
- 또한, 일부 제도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(대주주 심사범위 확대) PEF-SPC 구조의 경우 PEF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에도, SPC의 지분이 30%이상인 주주나 사원과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나 사원을 대주주 심사 범위에 포함
- (제도 간소화)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, 정부, 공공기관 등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, 정형화된 주식 취득 승인을 금감원장에게 위탁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현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, 일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의제3항 및 별표1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

4.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정비(안 제8조의2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저축은행의 대부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정비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도입 관련(신용공여 총액의 15% 이하 등, 감독규정)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하고, 신용공여 비율 제한 외의 금액 한도도 도입(감독규정 상 반영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저축은행이 신용공여한도 관리시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한도를 감안하도록 제도 정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대부업자에 대한 세부 한도를 규정할 예정

5.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(안 제8조의3, 별표 6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저축은행이 행정기관,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(행정정보 공동이용)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에 필요한 서류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저축은행이 정보 보유 기관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·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융소비자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6. 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사항 규정(안 제11조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토록 저축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관련 광고를 하는 경우,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함해야 하는 세부 내용을 규정함
 - 저축은행 대출상품 이용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
 -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
- ※ 세부 문구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에 위임(시행령 제11조의4제7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함으로써,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제3항('18.2.21. 개정)

7. 조문 오류 정정(안 제14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조문상 인용 조문 오류 정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시행령 제14조의2 중 제55호 부분을 제61호로 정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오류 정정으로 혼선 최소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8. 대부업자의 저축은행업 우회진입 방지(안 별표1, 별표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설립·인수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, 이용자 보호를 위해하기 위해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,
 -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·인수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동 규제를 회피하여 우회진입할 가능성 존재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·인수하는 경우,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법인(대부업의 자회사)의 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해 이해상충방지체계를 마련토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 도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